

# 운명 가를 탄핵심판 종착역서 선택 갈림길

## 박대통령 현재 출석 '마지막 카드' 꺼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한 만큼 대통령 측은 현재 출석의 당위론과 실효성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측은 21일 "현재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초 충분한 탄핵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호소한 뒤 박 대통령이 현재에서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진술 형태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방안을 상정했었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데다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기일의 내달 초 연기 요청마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 측은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현재가 전날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관과 국회의 대통령이 신문할 권리가 있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박 대통령 측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현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의 소추위원의 '송곳질문'을 받을 경우 대통령의 최후 변론 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여러 악조건을 감수하고라도 박 대통령이 현재에 출석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민 앞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이유가 어찌 됐든 박 대통령이 절차적 소명보다는 정의 활동에만 '몰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현재 출석이라는 '외길' 선택지만 남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법정 진술'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현재는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도착할 경우 어

당위론과 실효성 사이에서 고심  
최종변론 연기 불투명해지고  
"출석땀 신문" 강경한 현재에 당황  
현재도 대통령 출두 여부 검토  
최순실 22일 불출석 의사  
안중범으로 증인신문 끝나

떤 예우를 갖춰야 할지 새롭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가 1988년 구성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현재에 발자국을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현재의 공식 행사와 관련 기념방문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로서 이름을 남긴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현재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탄핵을 기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22일 모든 증인신문이 끝난다. 이날 16차 변론에서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이 증인으로 남게 됐다.

최 씨는 21일 현재에 나올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최 씨는 증인대에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등을 이유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며 진행을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부터), 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특별검사 기한 연장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4당 "황 권한대행 입장 안 밝히면 특검 연장안 내일 처리할 것"

### 여야 특검연장 법안 법사위 격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각각 대변인들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특검은 '편파적'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남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안 해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미 발의된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현행 특검법을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인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특검이 거의 석 달째 활동 중인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탄핵 선고전 하야?...범여권 정치적 해법 목소리

### 청와대 "터무니 없는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앞두고 범여권에서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민심'과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민심'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사회적 분열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재판은 사법적 해결이지만 사법적 해결이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냐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사법절차를 어느 정도 양해해준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답변, 다양한 해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먼저 정치적 해법의 운을 떠쥔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당원연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게 형사적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 문제 아니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며 "주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해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과 결합해 탄핵 인용을 적극 촉구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가 진전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끝까지 현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지방 4대 협의체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반드시 반영돼야"

### <시도지사·시도의회·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의회>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각 정당들의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이 포함돼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의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청남도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로 구성됐다.

이들은 간담회 후 채택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원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당시 지방분권 의지가 약해 117조와 118조 등 2개 조항에서만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 명칭의 '지방정부'로의 변경, 지방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곳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대 협의체는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 정당 등에도 지방 분권형 개헌을 정책화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